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52호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수목 생육환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가 이루어짐으로서 나무가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사전에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목의 식재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식재기반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재대상지의 토양조사를 토양조사 및 분석 전문 공공기관(대학교)을 통하여 실시하여 적합한 수종선정과 토양개질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ychm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재 기반 확보) ① 수목의 식재 위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미리 식재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수목 식재 시 사전에 식재 부분의 토양조사 및 분석 전문 공공기관(대학교)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가 부적합한 토양의 경우에는 생장에 필요한 토심, 배수, 통기 및 유기물과 무기물 함량 등의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으로 개질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② 토양조사의 대상은 모든 수목식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수목식재면적 20㎡당 1개씩 조사하며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식재 기반 확보) ① 수</u> <u>목의 식재 위치에 대하여는 다</u> <u>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미리</u> <u>식재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u>1. 수목 식재 시 사전에 식재 부</u> <u>분의 토양조사 및 분석 전문 공</u> <u>공기관(대학교)을 통하여 실시</u> <u>하여야 한다.</u></p> <p><u>2.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u> <u>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하</u> <u>며, 식재가 부적합한 토양의 경</u> <u>우에는 생장에 필요한 토심, 배</u> <u>수, 통기 및 유기물과 무기물</u> <u>함량 등의 수목의 생육 조건에</u> <u>적합한 양질의 토양으로 개질하</u> <u>여 식재하여야 한다.</u></p> <p><u>② 토양조사의 대상은 모든 수</u> <u>목식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u> <u>법은 수목식재면적 20㎡당 1개</u></p>

현행	개정안
	<p> <u>씩 조사하며 조사결과</u>의 활용 <u>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u> <u>로 정한다.</u> </p>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도지사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지방환경관서

2. 국립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